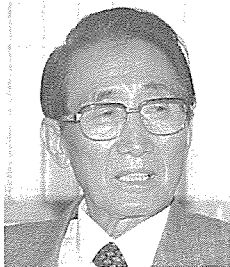


# 연구행정 너무 허술하고 한심

폐쇄적 행정의 종말을 -우리 과학계는 이 현실을 주시하자 -

“같은 목적을 위해 태어난 과학기술관계기관들이 아무런 인연이 없는 듯이 분열되고, 서로 협의하고 대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 과학기술계는 국가적·사회적 문제의 핵심에 서서 모든 지혜를 다하는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朴 益 洙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로회원/  
한국과학저술인협회 명예회장〉

나는 1963년도에 상임 원자력위원으로 임명되어 대학에서 관직으로 옮겼다. 같은 자리에서 약 10년간 근무하다가 27년 지난 1999년 5월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통령 직속)의 위원장(장관급)으로 다시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때가 75세.

마지막 공직생활이었기에 이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물론 내가 해야 할 본무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관한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보고 하는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정확한 자

문보고하려면 우선 행정의 모든 기본 데이터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평소의 생각이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과학기술 행정 및 제도의 전체적인 모습은 66년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생기고 그 다음 과학기술처(MOST), 한국과학재단(KOSEF)이 발족했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그 당시의 목적과 역할이 전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때의 그것들은 공존공생의 관계로 일심동체가 되어 국가정책 목적에 기여한다고 다짐하며 출발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IMF는 겨우 끝났다고 하지만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세워, 새로운 세계의 변화에 대처할 구조조정은 물론 이에따라 새로운 개혁정책도 완수해야 할 판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 과학기술 행정 및 과학기술계는 당연히 이러한 국가적·사회적 문제의 핵심에 서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힘과 지혜를 다하는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60,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과학기술 5개년 계획으로 그 당시 우리는 연구의 분명한 목표를 갖고 국가계획정책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며 동시에 오늘의 33개 과학기술관계 정부출연(연)을 설립할 수 있는 공신력을 얻었다. 따라서 당시 다른 분야에서 일한 사람들보다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대우는 매우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과학기술 행정 및 과학기술계의 현실은 어떠한가. 같은 목적을 위해 같이 태어났던 MOST, KAIST, KIST, KOSEF은 서로 완전히 독자적의 목표를 갖고 서로 아무런 인연이 없는 듯 분열되고 있고 같은 연구단지 안에 있으면서도 공식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대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노조에 시달리고 있어도 타인의 일처럼 옆에서 구경하고, 나만이 안전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다. 연구단지의 기관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그리고 정부출연(연)은 정책연구기관으로 만들어 놓고 왜 연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연구용역형식으로 운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PBS연구용역기관은 연구용역시장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정책연구기관은 필요한 정책연구를 하는 한, 손익계산 없이 당연히 그 존립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일부 인건비와 기본 연구비를 정부보조로 받으면서 부족부분은 연구용역사업으로 충당한다. 그런데 연구용역시장에서 몇년동안 이렇게 연구기관

을 운영하다 보면 연구자의 전문성이 다양하게 복잡해져서 '연구의 목표관리'가 어렵게 되어간다. 지금은 국영도 법인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서 우리 연구기관들이 천덕꾸러기 보따리처럼 행정관리들의 판단에 따라 이리저리 취급되고 있는 현실은 보기에 너무나 민망스럽다.

그동안 확고한 국가정책 목표도 없이 그리고 가능한 경쟁의 조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현실의 위급성과 경제불안을 외면한 채 선진국 연구에만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따위 연구계획들이 결국 '연구·연습'한 꼴이 되고 말았으니 정책당국에 떨시당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당연한 업보가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이 시점에 '연습'도 '연구'라고 대답하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연구관리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다. 1990년 13개 과학기술행정기관의 '연구관리'에 대한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원의 한 감사관이 우리나라 과학기술관계 연구관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입니다."라고 표현했던 말이 너무나 실감있게 느껴졌다.

나는 우리나라의 '연구평가제도'나 '연구의 목표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터이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얻기 위해 우선 공신력있는 학술기관에 용역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처음 회의에 참석했던 대학교수, 퇴임 연구자들은 그 다음 소집한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은 위원회 구성이 실패한 셈이다. 물론

과학기술연구관계 행정부는 자문회의의 이러한 계획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며 따라서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다. 그러한 미움을 감수하면서 자문회의의 계획에 동참하고 협력한다는 것은 미련한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에 있는 우리 과학기술자협회의 협력을 얻기로 결심하고 행정처장을 데리고 출국을 했다. 회장을 위시한 현역 간부들과의 만남을 원했는데 참석한 사람들은 일반회원, 원로회원, 유학생들이었다. "모두 자기 일이 바빠서 못온 것 같습니다"라며 행정처장이 변명했지만 이것은 이미 서울에서부터 그들이 공작한 각본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라 직감했다. 옛날부터 친분이 있던 분이 껏속말로 "처음부터 이렇게 무효화시키려고 사전에 계획한 것입니다."라고 알려주었다.

일본과 독일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좋은 일이며 감사해야할 일이 아닌가. 나는 이러한 고의적인 방해를 3년 동안 수없이 당했으며, 공직기관 속에 극단의 이기적인 힘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도 후진국 행정에서 탈피하지 못한 우리의 불행하고도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이번에 연구관리 실태를 조사분석한 중요한 결과를 다음에 몇가지만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 연구과제 선정기준이 막연하여 연구의 목표관리가 어렵게 되어있

으며, 둘째 - 채점방식은 사전에 채점간의 비율을 설정해 놓고 특히 불합격 비율은 10~20% 이하로 조작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셋째 - 연구팀의 적정여부, 연구비의 적정여부, 연구책임자의 적격여부 등에 대한 평가가 너무 소홀히 다루어졌고, 넷째 - 「연구결과 평가보고서」(보고내용에 문제가 많음)만 있고 「연구결과 활용 행정보고서(가칭)」는 없다. 이것은 활용을 위한 행정노력이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다섯째 - 프로그램의 소과제 연구평가만 하고 프로그램 과제에 대한 전체평가는 하지 않고 있다. 이와같이 전체적으로 평가제도의 운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며 임의적인 조작이 많은 신뢰할 수 없는 평가제도였다.

**엄격한 연구평가제도의 운영은 과학기술연구 행정의 핵심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부실하고 형식적인 연구평가제도의 운영은 그만큼 연구비의 낭비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투자가 이러한 부실한 연구관리에 의해 집행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고 우리의 연구행정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어놓고도 모르는체 계속 지금까지 운영해 왔으니 이것을 무어라 변명할 것인지. 새로 취임한 김영환장관님의 새로운 정책과 혁신을 크게 기대해 본다.

참으로 폐쇄적인 행정은 제발 이제 그만두기를 바란다. 우리 과학기술계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흐르는 물은 싱싱하지만 고인 물은 부패하기 마련이다.'라는 격언을 다같이 명심할 일이다. ⑤7